

## Online Series

2016. 05.24. | CO 16-17

#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조한범(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의 핵개발 의도: ‘선 핵보유 후 협상’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병진노선은 사실상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 노선’을 의미한다. 김정은 체제의 선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간된 대중학습교재인 ‘100문 100답으로 보는 오늘의 조선’은 “핵 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해서 경제건설에 자금과 로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목표는 실전배치이며, ‘선 핵보유 후 협상’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개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1994년 북미기본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 등 핵개발과 협상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2012년 2월 2·29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인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후 협상국면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진행된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 장거리 로켓발사 중 50%가 집권 5년에 불과한 김정은 정권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단계와 실전배치 이후의 협상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와 더불어 이미 사거리 300km~1300km에 이르는 스커드(SCUD) 및 노동계열의 핵탄두 탑재 가능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여 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핵기술을 완성하게 되면 협상력은 이전과 비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과거 핵’에 대한 암묵적 동의와 아울러 ‘미래 핵’을 담보로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살라미 전략을 통해 대북제재의 완화와 보상 등 다양한 실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완성 이전에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이다.

### 미국의 북핵 인식과 ‘과도적 합의’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당장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기술은 아직 미지수이며, 북한이 공개한 지상 대기권 재진입 실험 역시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미군전력의 전진배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등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진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4월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를 제안했다. ‘과도적 합의’는 근시일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동결수준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인혼은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한다. 지난 4월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 대안은 동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월 2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평화협정 대화 제의시 미국이 응해야 한다”고 보도했으며, 5월 4일 한국을 비공식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비공식 대화에서 평화협정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각에서 ‘과도적 합의’와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출구전략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적 합의론’은 북한의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중장기적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한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과 ‘과도적 합의’ 이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 단계에서 ‘과도적 합의’를 도출할 경우 미국은 북핵 개발의 동결과 아울러 미국에 대한 직접적 핵위협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동시에 핵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도적 합의’를 통해 북한은 과거핵에 대한 잠정적 동의를 확보하고 미래핵을 담보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살라미 전략을 통해 다양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 비확산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적 합의’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buffer zone)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과도적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유이다.

### 한국안보의 고비용 구조

‘과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한국은 안보 고비용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과 킬체인(Kill Chain), 그리고 미국의 사드(THAAD)와 확장억제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KAMD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완벽한 요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 MD체제는 태생부터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 공격력을 상당부분 무력화하고 반격할 경우 핵군사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핵강국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이며, 전장의 중심이 짧은 한국의 경우 단 한발의 핵미사일로도 치명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킬체인을 활용한 선제공격 역시 북한지역에 은닉된 수많은 군사적 거점에 대한 완벽한 정보 획득이 어려우며, 한국군의 선제타격자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 협의가 진행중인 사드체계는 요격미사일이 48발로 북한의 실전배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고려할 경우 한반도 이남에 대한 전면적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력 역시 최종적인 결정권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과도적 합의’를 통해 북한이 과거핵에 대한 잠정적 동의를 확보하고 한반도 이남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과도적 합의’로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일정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을 불완전한 북핵 대응체제에

쏟아 부어야 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국가의 안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북한 비핵화 전략의 모색

자체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金正은이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정권과 체제의 성격변화 역시 어려운 난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보위협 해소와 통일의 준비 모두에 필수 전제인 이유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적 합의론’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중심의 비핵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이해관계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적 합의’의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압박의 수단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소를 위한 모든 협상과 대화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비핵화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북한 핵위협을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해소가 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